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국가균형발전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균형발전정책, 지방 시각에서 전면 수정을”



광주일보가 광주전남연구원 개원 29주년을 맞아 개최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가 23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광주전남연구원 상생마루에서 열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재정분권 1단계, 지역 간 격차 키우고 균특회계 감축 초래
지방인구 감소 가속...SOC 배려·소멸위기지역 지원법 필요
국토균형발전 핵심은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23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 시민대표 등은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등을 모두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 방안이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만을 위한 불균형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된 재정 분권 1단계가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키우고, 호남권 등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감축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중앙정부, 수도권, 호남권 등 비수도권이 주도해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균형발전은 '시혜적 차원'에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지역민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지방의 시각에서 비수도권이 주도해야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과거 수십년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국가불균형을 초래한 만큼 차등적 재정분권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세 수입 측면에서 수도권이 48조원(57%), 비수도권이 36조원(43%)로 비정상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재정 규모는 수도권 98.5조원(39%), 비수도권 155조원(61%)으로 정부가 수도권에 50.5조원, 비수도권에 119조원을 보전해 주고 있다.

오 책임연구위원은 1967년부터 2018년까지 61년 동안 지방재정을 분석해 과거 재정 불균형이 현재 국가불균형의 원인이었음을 밝혀냈다. 61년간 모두 3201조원의 지방재정(일반회계) 가운데 수도권이 36.8%(1179조원), 영남권이 27.7%(885조원)를 차지하고, 호남권은 고작 15.7%(502조원)에 그쳤다. 기반시설(SOC) 및 산업경제 관련 지출은 61년 동안 627조원이 집행됐으며, 이 가운데 수도권이 36.3%(227조원), 영남권이 28.8%(180.6조원)를 가져갔다. 호남권은 14.0%(87.5조원)였다. 그는 지역경제 성장지역에 대해서는 세출 측면의 권한 이양, 지역경제 침체 지역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라는 '차등적인 재정 분권'을 추진해야 하며, 국가균형발전프로젝

트(에타면제사업) 매년 정례화, 기반시설(SOC) 호남권 배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및 지역 특성 반영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일 초빙연구위원은 '광주·전남 상생협력 당위성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광주·전남이 지역경제력 및 지역혁신지수에서 8위와 16위, 균형발전지표에서는 7위와 17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와 미래가 암울하다는 의미다. 정치적 영향력도 감소하고 있다. 14대 국회에서 호남권 국회의원은 39명이었지만, 21대에는 충청권과 같은 28명으로 무려 11명의 금배지가 사라졌다.

김 초빙연구위원은 "상생협력은 이제 광주·전남이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며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민형정 책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에서 호남권에서 지난해에만 8만 3000명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등 저출산 고령화 추세 속에 젊은층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지방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질적 구조마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민 책임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상생협력이 중요 키워드 돼야", "비수도권 생산 기능 중시해야" 등 주장-광주전

남연구원의 연구발표에 대해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는 "재정분권, 상생협력, 지방소멸 등은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며 "균형발전을 구현할 공간 규모를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지속적인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욱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이 소비, 비수도권이 생산의 기능을 주로 맡고 있다고 보고, 비수도권의 생산 기능을 중시하는 재정정책과 탄소세 등 새롭게 논의되는 세금을 지방세로 하는 부분도 논의할만하다"고 설명했다.

박문옥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수도권의 집중은 너무도 심각한 문제이며, 국토균형발전의 포커스는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이라며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문화·사회간접자본 등의 확충을 통해 지방에서도 수도권에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란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의 균형발전은 중앙정부의 입장에서의 대책이며, 지방의 입장에서의 균형발전 대책을 만들고 이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앞으로 광주전남연구원 상생협력, 균형발전 등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 사·도의회, 시민사회 등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 로드맵을 제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낙연 “내년 재보선 늦지않게 결정”

방송기자클럽 토론회...“김홍걸 제명, 최고 강력한 제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후보를 낼 것인지 늦지 않게 책임 있게 결정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3일 서울 목동 예술인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어려운 아리바리 여당으로서 어떤 것이 책임 있는 처신인가가 중요한 고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미에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가 상당히 분명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더 정확한 진실은 검찰 조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 논란을 빚은 의원들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부동산을 축소 신고한 김홍걸 의원의 제명과 관련, “무늬만 징계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가 제명”이라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선 “그것(기소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다름이 있다”며 “당이 전혀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당원권을 정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스가 정권 출범에 대해 “스가 총리가 아베 총리 시절의 내각을 거의 답습하고, 아베 총리의 외교 조연을 듣겠다고 공언한 것은 조금 걱정이 된다”면서도 “합리주의자고 한일관계를 중요시하는 분이라 아베 총리 때보다 진전된 태도의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개정하면 협치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협치가 지연의 도구로 쓰이면 안 된다”며 “어느 한 쪽 의견대로 끌려다니면 협치가 아니라 굴종”이라고 말했다.

대권주자로서 문재인 대통령 및 친문(친문재인) 세력과 차별화를 할 것이라 관측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임기 절반 이상을 총리로 일했고 그 만큼의 책임이 있다”며 “마치 자기는 무관한 것인 양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답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때로는 보완·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승·발전시킬 책임이 제게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당정 ‘한국판 뉴딜’ 입법 속도전

정기국회 처리 합심

당정이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정기국회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2차 회의에서 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이광재 총괄본

부장은 “코로나19 전대미문의 위기를 넘어가는 핵심이 한국형 뉴딜”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1차 입법과제가 52개”라며 “전자금융거래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36개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소병철 “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지급 환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군) 국회의원은 23일 “이번 4차 추경안 통과로 법인택시 기사님들도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매출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법인택시 업계에 추석을 앞두고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은 정부의 소상공인 세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4차 추경안에는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총 81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개인택시와의 형평성 논란이 해소됐다.

소 의원은 “순천의 법인택시 기사들께서 건의해주신 대로 개인택시와 같은 금액을 지원 받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 이번 추경안 통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순천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